

2012. 10. 19.

*이 자료는 세계경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출입기자단에도 동시 배포됩니다.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0월 19일(금) 15:00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개최 통일과 한국경제 국제컨퍼런스

- 일 자: 2012년 10월 21(일)~22일(월)
- 장 소: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룸(3F)
- 주 최: KDI ·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KDI(원장: 현오석),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 일), 한국수출입 은행(행장: 김용환),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소장: 노르베르트 에 쉬보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소장: 프레드 버그스텐)는 10월 21~22일 「통일과 한국경제」 제하의 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
- 컨퍼런스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남북 관계 현황 및 통일 비용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
-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 '통일의 득과 실', '통일 재원조달' 및 '국제사회의 역할' 제하의 4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프로그램 참조)

- 컨퍼런스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브레드 밥슨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 올리히 블룸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 교수,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통독 당시 서독 재무차관, 칼 하인즈 파케Karl-Heinz Paque 독일 Magdeburg대 교수 등 국내외 최고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

❖ 문의 : 이 석 KDI 북한경제연구팀장(02-958-4207)

- ❖ 첨부 1. 국·영문 프로그램(IGE/KEXIM/KAS/KDI/PIIE '통일과 한국경제' 국제컨퍼런스)
- ❖ 첨부 2. 주제발표 요약

❖ 첨부 1. 프로그램(국문)

시 간	일 정
08:30~09:00	등록
09:00~09:10	개회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축사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09:10~09:50	기조연설 류우익 통일부 장관 만프레드 카르스텐스 前 독일 재무차관 겸 내무장관
세션1.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	
09:50~11:10	사회 한승주 前 외무부 장관 발표 1. 남북관계: 현재의 상황, 과제, 그리고 기회 ▪ 브래드 밥슨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 발표 2. 남북관계와 향후 전망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 토론 ▪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 ▪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 마이클 똥케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세션2. 통일의 득과 실	
11:20~12:30	사회 현오석 KDI 원장 발표 3. 통일에 대한 고찰 ▪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발표 4. 통일의 비용과 편익: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팀 선임연구위원 토론 ▪ 칼 하인츠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경제학 교수 (前 작센안할트주 재무장관) ▪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팀장
12:30~13:45	오찬 오찬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세션3. 통일자원조달

14:00~15:20	<p>사회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p> <p>발표 5. 국제적 노력을 통한 통일비용 마련 ▪ 울리히 블룸 독일 할레잘레대 경제학 교수</p> <p>발표 6.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p> <p>토론 ▪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 홀거 볼프 조지타운대 국제학 교수</p>
15:30~15:50	<p>특별연설. 1990년 이후 동독과 세계경제의 통합 ▪ 칼 하인츠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경제학 교수 (前 작센안할트주 재무장관)</p>

세션4. 국제사회의 역할

15:50~17:00	<p>사회 브래드 밥슨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p> <p>발표 7. 국제적 차원에서의 독일 통일과 경제 이행 ▪ 홀거 볼프 조지타운대 국제학 교수</p> <p>발표 8.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p> <p>토론 ▪ 피터 벡 아시아재단 서울사무소장 ▪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p>
-------------	--

종합토론

17:00~17:45	<p>사회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p> <p>토론 만프레드 카르스텐스 前 독일 재무차관 겸 내무장관 현오석 KDI 원장 칼 하인츠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경제학 교수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p>
-------------	--

❖ 첨부 1. 프로그램(영문)

Sunday, October 21, 2012	
18:30-20:30 Welcoming Dinner	Welcoming Remarks Hong-Koo Lee, Former Prime Minister Dinner Speech Jaewan Bahk,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Monday, October 22, 2012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s Il SaKong, Chairman, IGE Congratulatory Remarks Yong Hwan Kim, Chairman, KEXIM
09:10-09:50	Keynote Address Woo-ik Yu, Minister of Unification Manfred Carstens, Former Deputy Finance Minister, Germany
09:50-11:10 Session 1 Current State of South-North Relations and Challenges	Moderator Sung-Joo Han,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esenters Brad Babson, Chair, DPRK Economic Forum, Johns Hopkins University Ho-Yeol Yoo, Professor,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Panelists In-Taek Hyun,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Yonsei University Michael Funk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mburg
11:10-11:20	Break
11:20-12:30 Session 2 Benefits and Costs of Unification	Moderator Oh-Seok Hyun, President, KDI Presenters Marcus Noland, Deputy Director, PIIE Ildong Koh, Senior Fellow, North Korean Economic Team, KDI Panelists Karl-Heinz Paqué,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gdeburg (former Minister of Finance, East German State of Sachsen-Anhalt, 2002-06) Suk Lee, Director, North Korean Economic Team, KDI

<p>12:30-13:45 Luncheon</p>	<p>Luncheon Speech Sung-Hwan Kim,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p>
<p>14:00-15:20 Session 3 Financing Unification Costs</p>	<p>Moderator Marcus Noland, Deputy Director, PIIE</p> <p>Presenters Ulrich Blum,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lle-Saale Youngsun Koh, Chief Economist, KDI</p> <p>Panelists Hyoungsoo Zang, Professor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Holger Wolf,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p>
<p>15:20-15:30</p>	<p>Break</p>
<p>15:30-15:50 Special Address</p>	<p>“Eastern German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after 1990” Karl-Heinz Paqué,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gdeburg (former Minister of Finance, East German State of Sachsen-Anhalt, 2002-06)</p>
<p>15:50-17:00 Session 4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p>	<p>Moderator Brad Babson, Chair, DPRK Economic Forum, Johns Hopkins University</p> <p>Presenters Holger Wolf,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Byung-Yeon Kim, Professor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p> <p>Panelists Peter Beck, Korea Representative, The Asia Foundation Joongho Kim, Senior Research Fellow, KEXIM</p>
<p>17:00-17:45 Wrap-up Panel Discussion</p>	<p>Moderator Il SaKong, Chairman, IGE</p> <p>Panelists Manfred Carstens, Former Deputy Finance Minister, Germany Oh-Seok Hyun, President, KDI Karl-Heinz Paqué,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gdeburg Marcus Noland, Deputy Director, PIIE</p>

❖ 첨부 2. 발표 요약

세션 1.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

“North-South Relations: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남북관계: 현재의 상황, 과제, 그리고 기회

브래드 뱁슨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

- 기존의 세습정권에서 집단적, 분산적 정권을 향한 북한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미래지향적 모습과 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중심 내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젊은 층의 동 연령대 교류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개방적인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기존의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와 희생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복지의 실현 논리로 체제 정당성을 재정립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 변화의 새로운 변인으로 작용할 것임.
- 남한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이 포용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거시경제 및 재정의 난관은 향후 남한 정부가 통일비용조달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북·중 경제협력에 바탕한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는 향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도전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며, 남북한은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및 공격적 대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북·중 경제협력 심화는 남북경제협력과는 다른 형태로 북한 경제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중국은 북한의 민주화 보다는 당이 주도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남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에게 민주주의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임.

□ 향후 한반도의 미래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남북한이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함.

○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 안보 보장에 중요한 변수지만, 종국적으로 통일과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

○ 최선의 전략은 북한이 체제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남한과의 대결 구도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임.

○ 정부 주도의 지원보다는 상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경제 지원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상호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진해야 함.

○ 기존의 6자회담 또는 개선된 형태의 프레임 하에서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다자적 합의를 이끌어 내되 핵을 비롯한 여타 안보의제와 경제협력추진의 연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남북발전을 위한 장기적 요인들과 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남북한 내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양측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남북관계와 향후 전망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

- 남북관계 역학구도의 이해는 변화하는 국내 정치 환경, 북한 내부 정세, 한반도 주변정세, 국제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주요 발전방향은 ‘비핵, 개방, 3000 의 원칙’,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관리 및 상호협력’, ‘공동번영 정책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그리고 그랜드 바겐 접근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실질적 남북관계는 북한의 오해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08년 7월 발생) 및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 및 6·15, 10·4 공동선언의 무조건적인 이행 요구, 남한의 대북접근법 변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정권세습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요인에 의해 위기에 직면함.
- 향후 남북대화 가능성은 12월 한국 대선과 남북한 신뢰구축 정도, 2012년 한국의 주요 정치 환경 변화, 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정부 간 공식 대화 재개 여부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임.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2012~13년도 과제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음.
 - 현 정부하에서는 5.24조치를 유지하면서 대선까지의 기간동안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

- 정권교체기 초당적 의사소통 및 협력
 -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
 - 햇볕정책과 전략적 인내를 넘어선 접근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의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예상되는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세션 2. 통일의 득과 실

“Contemplating Unification”

통일에 대한 고찰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예상되는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통합’과 ‘계획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통합’
 -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생산물시장(product markets)의 통합 보다는 요소시장(factor markets)의 통합에 의한 영향이 잠정적으로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계획되지 않는 급작스러운 통합의 경우에는 공공질서를 빠르게 확립하고 사적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통일 경험을 돌이켜 보면, 서독은 이주민의 유입 저지, 서독의 임금 보호, 소유권 복원에 대한 정치 목표 달성과 거시경제 안정화, 무역 및 가격 자유화, 민영화, 사회안전망 생성, 상업거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등 이행 경제의 일반적 과제에 직면한 바 있음.
- 남북한과 구 동서독의 상황은 경제 지표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이에 있어서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과 남한의 경제 격차는 과거 동독과 서독의 격차보다 크고, 북한의 경제구조 역시 동독에 비해 훨씬 왜곡되어 있으며, 남한은 구서독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며, 북한 주민들은 동독주민들보다 훨씬 더 고립되어 있음.

- 한편, 북한이 근본적인 개혁에 돌입하면 국제무역 및 투자환경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로 생산품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종사분야를 바꿔야 할 것
- 경제통합의 핵심 변수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북한의 흡수 속도, 남한으로 이주할 북한 노동력의 규모, 대북투자규모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제통합에 따라 북한의 GDP, GNP는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통일과 관련한 정책대안으로 화해협력정책의 추진,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흑자예산의 추구, 투자환경의 법제도적 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및 통일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 향후 통일 비용을 감안한 흑자 예산 추구 방안 마련
 -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여타 금융 관련법을 강화하고, 소유권 문제는 복원이 아닌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헐값에 외국 자본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실질환율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초기의 화폐통합비율 보다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에 하는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

“Benefit and Cost of Korea's Unification: Major Issues and Possible Responses”

통일의 비용과 편익: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팀 선임연구원

- 독일 통일을 통해서 얻게 된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통일에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며, 남북한의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남한 주민의 부담률이 서독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임.
- 대규모 통일비용의 제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통일비용의 추정 결과로 인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시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대규모 통일비용에 따른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편익의 제시를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나 대응은 통일이라는 문제를 지극히 안이한 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즉, 이러한 시각은 통일을 마치 북한이라는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함으로써, 통일비용을 부실기업 인수비용 정도로 인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물론 “통일비용과 편익을 제시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통일은 경제적 선택대상도 아니고 또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상황을 고려할 때 초보적인 비용편익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음.

- 대부분의 편익은 개인 또는 국가적 자부심 고취나 인도주의적 가치의 증대 등 일반적인 경제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는 요소들이며, 상당부분 통일 이전 일정 수준 이상의 남북화해를 통해서도 달성 가능함.
- 굳이 비용편익적인 접근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이 통일경로에 의존적인 반면 편익은 경로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용최소화가 효용극대화의 대체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통독의 사례가 한반도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용한 사고실험(Gedanken experiment)으로써 그 가치는 인정됨.
- 남북한은 동서독보다 더 큰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내부 상황은 통일 이전 동독보다 훨씬 절망적이나,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상대적으로 용이
- 흔히 통일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우려되고 있으나 북한의 인구분포 및 휴전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인구이동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이주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DMZ로 인해 통일직전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국경관리가 허술한 중국으로의 탈출 또는 탈북이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구이동이 통일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
- 남북한은 EU 형태의 통합보다는 독일식의 통합모델을 따르겠지만, 독일과 같은 화폐전환비율을 통한 동독지역 시장가격 결정보다는 남한의 시장 가격에 기반해 인위적인 초기 가격 설정이 필요할 전망

- 화폐통합에 앞서 금융 규제 체제를 확립하고 재정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정의 및 소득분배 관점에서 개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존중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지역의 민영화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소유권 복원 (restitution)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나, 원소유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compensation)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토지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일단 모든 자산을 국유화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자는 의견과 시장성 자산으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양분됨.
 - 대부분의 군수산업체는 해체되어야 하며, 경쟁력이 없는 기존 대규모 민간기업소 역시 해체 이후 그린필드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임.
- 통일 이후의 가장 큰 경제적 과제는 북한의 투자유치와 북한 인력의 임금-생산성 격차 해소 문제임.
 - 크게 보아 동독이나 북한지역의 산업정착을 위한 방안으로서 ① 첨단산업유치를 전제로 한 고임금 정책과 ② 전통산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양 극단의 산업-임금 정책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감액변동상여금」 (self-eliminating flexible employment bonus, Akerlof et al.) 기반의 버클리 모델이나 생산유형 변화에 따른 점진적인 가격구조 변동을 유도하는 유기적 체제 변환(organic system transformation, Sinn & Sinn)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통일 이후 과도기에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져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과제로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세션 3. 통일재원조달

“Unification Costs - an International Endeavor”

국제적 노력을 통한 통일비용 마련

올리히 블룸 독일 Halle-Saale 대학교 경제학 교수

- 한국의 통일비용 마련에는 한국의 의지와 관계 없이 규모의 차이를 불문하고 국제사회의 자금조달이 수반될 것임.
 - 통일의 수순과 비용 추산에 기반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따를 때, 통일에 대한 충분한 경제·정치적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통일 이후 한국은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 투명성 보장을 통해 안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비용요소 측정과 관련해, 통일 당시 동서독의 차이와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한과 북한의 인구차이는 2:1(서독과 동독은 4:1), 경제성과는 20:1(서독과 동독은 5:1)의 편차를 보임.
 -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성장곡선이 통일 이전 서독 경제성장 곡선 추정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강한 경로의존성이 드러남.
-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교육체제와 노동시장 자유화, 잠재적 혁신역량 극대화, 통일기금을 통한 재정안정성 추구, 민영화 등 비용요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동서독의 경제구조는 공적자금 운용과 인구 이동에 따라 변화했으며,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냄.
 - 독일 통일 당시, 국내외 요인들에 영향 받는 환율,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의 결정에 있어 중앙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 독일과 비교할 때 남북한의 통일과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

“ Financing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

한국과 북한의 통일 재정조달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 통일 시 한국은 통일 후 매년 GDP의 4~5%를 동독으로 이전한 서독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임.
- 통일에 따른 부문별 소비 수요를 고려, 남한은 사회기반시설, 주택, 보건, 사회보험, 공적부조, 재정 균등 등 북한으로의 다양한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임.
 - 사회기반시설: 대중교통, 전기,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의 확충
 - 주택 및 복리 시설: 북한의 주택, 학교, 병원 수리 및 추가 보유량 마련
 - 의료비: 통일 이후 현재 GDP의 5% 가까이, 총 복지비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는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제한된 규모로 소개된 만큼 통일이 되더라도 공공자금 조달에 대한 위협 미미
 - 공적부조: 통일 이후 북한으로의 지출이 무조건적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 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균등: 중앙 정부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지방 재정 지원에 투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앙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소비 수요금액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재분배, 민간부문 자원 동원, 증세, 채권 발행 등이 있음.
 - 지출 재분배: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경제사업, 교육, 주택, 지방정부 지원 등에 사용될 것임.
 - 민간부문 자원 동원: 정부는 민관 협력 및 시장기제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음.
 - 증세: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활용해야 함.
 - *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용이하나, 법인세는 주변 국과의 세율 경쟁으로 쉽게 올리지 못할 것임.
 - 채권 발행: 정부는 해외 채권시장을 활용해 소비 수요금액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음.

- 통일재원 조달 이후 중요한 과제인 지출우선순위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공부채의 과도한 증가 및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출 측면에서는 예산 제한뿐 아니라 경상수지적자에도 주목해야 하며, 과도한 공공지출은 대외불균형(external imbalances)과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제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촉발해 통일 이후 필요한 각종 재건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통일재원 조달 시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채무 증대를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세션 4. 국제사회의 역할

“Reunific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in Germany: The International Dimension”

국제적 차원에서의 독일의 통일과 경제 이행

홀거 울프 조지타운대 국제학 교수

- 1990~91년 사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나라들 중 유일하게 통일을 경험한 동독의 경제 이행에 미친 통일의 영향을 검토
 - 통일과 경제 이행의 두 가지 과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경제 이행이 선행된 통일이라는 2국가적 접근전략과 경제 이행을 동반한 통일이라는 1국가적 접근전략이 있음.

- 통일은 즉각적 제도 도입, 전환성 보장, 무역장벽 철폐 등 조기집행적(front-loaded) 이행 전략과 조정비용 구조에 따라 향후 전략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한편, 조기조정에 따른 비용 감소와 편익 증대를 초래하기도 함.
 - 조기집행구조는 불확실성 해소, 효율성 증대, 투자 촉진 등의 장점을 갖지만, 과도한 변화 속도에 따라 이행 경제가 요구하는 구체적 제도 조율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초기비용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
 - 독일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동독과 서독 사이의 대부분 제도를 조율할 수 있었고, 서독의 투자 및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했으나, 통일 직후 급증한 동독 지역의 단위노동비용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음.

□ 여타의 이행 경제들과 비교할 때 동독은 또 하나의 정책과제인 통일의 병행 추진 전략을 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음.

○ 그러나 독일의 통일도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향후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될 남북한의 경우 필요한 제도적 조정을 달성하고, 통일 초기비용에 따른 장기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두 지역 간 생산성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The Roles of the Global Community for the Korean Unification”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

- 통일의 복잡성은 남북한 간 현격한 경제지표의 차이뿐만 아니라 통합적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 이행, 추격성장, 국가 건설 등에 이르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기인
- 성공적 통일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평화와 질서에 기반한 통일, 한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협조에 바탕한 통일,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 복지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일이 있음.
 - 평화와 질서는 성공적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 한국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정당성과 의지, 자원을 갖고 있으며, 통일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남한과 중국으로의 대량 이주 등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정치·사회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함.
- 중국식의 점진적 변화에 비해 북한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시 더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붕괴 시나리오 가정 하에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함.

- 북한 사회 안정 및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 미국이 함께 협의해 개입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식량, 보건 등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NGO의 역할이 중요
- 급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대량 난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남한과 주변국에 난민 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NGO 및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수적
-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IFIs)가 과거 이행 경제들에 적용한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함.
-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은 워싱턴합의와 같이 단편일률적 체제 수용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함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발전성과 확인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함.
- 북한은 천연자원 및 섬유, 의류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부문에서도 상당한 사업기회가 있으므로 북한 기업들의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도
- 교육 사업 확장을 위한 국내외 NGO의 역할 강화 필요
- 북한 내 지역 비즈니스를 장려해 향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국제금융기구(IFIs)들은 국내 학자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